

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단가도 각각 5.0% 올랐다.

보훈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 형편이 열악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500억원 규모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 신설 등을 약속했다.

### ■ 박승춘 전 처장 검찰 수사 의뢰

피우진 보훈처장은 취임 직후 보훈처 차원의 ‘적폐청산’ 작업에 착수했다. 보훈처는 박승춘 전 처장 재임 기간 보훈처의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12월 박 전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전 처장 재임 기간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의 조사 또는 자체 감사가 미흡하거나 전무했다는 것이다.

보훈처가 조사한 박 전 처장 재임 기간 비위 의혹은 우편향 논란을 빚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 DVD 제작·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등이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위법 혐의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훈처의 공식 기강은 물론 향후 우리 보훈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보훈처가 박 전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보훈처 차원의 적폐청산이 본격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국방정보본부장을 지낸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6년 3개월 동안 보훈처장으로 재직하며 안보교육 사업 등을 통해 보수 이념 확산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노인·여성·청소년

### 노인

#### ■ 어린이보다 많아진 노인…700만 명 돌파

인구 고령화와 출생아 감소가 해마다 심각해지며 2016년 65세 노인인구가 처음으로 유소년인구(0~14세)를 넘어서

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고령인구는 2016년 676만 3천 명 대비 31만3천 명(4.6%) 증가한 707만6천 명을 기록했다.

반면 유소년인구는 685만6천 명에서 675만1천 명으로 10만 5천 명(1.5%) 감소했다. 특히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총인구 5천145만 명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13.8%)이 유소년인구 비중(13.2%)을 추월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030년에는 1천만 명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1천881만3천 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 노인 빈곤문제 심각…기초연금 20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우리나라 노인이 빈곤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은 전체 인구 대비 60.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평균(86.8%)보다 상당히 낮았다. 그 결과 66~75세 노인의 빈곤 위험은 전체 국민 평균의 3.08배, 76세 이상 노인은 4.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전체 빈곤 인구 중 66~75세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8.7%에서 2014년 26.6%로, 76세 이상 노인 비중은 9.2%에서 22.4%로 늘었다. 전(前) 노인 시기인 51~65세에도 고용 불안정성과 조기퇴직, 자영업 전환과 폐업 등으로 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노후 빈곤 문제는 더 심각하다.

연구진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노동시장 특성상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의 빈곤과 불안정을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적연금의 근본적 취약성과 내재적 불평등을 극복하려면 기초연금과 같은 준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률은 66~75세 가구주 가구 59.2%, 76세 이상 가구주 가구 75.3%로 높은 편이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각각 월 16만7천원, 17만5천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소득 기반 확대를 위해 기초연금을 2018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 4월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초연금액을 올리려면 2018년 2조7천억원(국비 2조1천원, 지방비 6천억원)이 더 필요하며 앞으로 5년간 연평균 5조9천억원(국비 4조5천억원, 지방비 1조4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했다.

이를 통해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6년 현재 46.5%에서 2018년 44.6%, 2021년 42.4%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7년 4월 475만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516만6천 명, 2021년 598만 명, 2027년 810만5천 명 등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금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

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2018년 4월로 예정했던 25만원으로의 인상 지급을 9월로 연기했다.

## 여성 · 청소년

### ■ ‘줬다 뺏는 기초연금’ 보충성 원리 논란

노인복지시민단체가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했던 기초연금의 ‘독소조항’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에 보면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가 있는데,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 하위 70% 이하면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빈곤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를 받을 때 전 달에 받았던 기초연금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이기 때문이다. 극빈층 노인 사이에 정부가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았다가 토해내는 기초생활 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4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노인 관련 시민단체들은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액을 제외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4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회원들이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층 노인이 3만5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45만8천176명이고 이 중에서 실제 기초연금 수령자는 42만3천87명이다. 3만5천89명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데도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를 지원받는 극빈층에 해당한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것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됐다.

### ■ 개요

2016년 불어닥친 페미니즘 열풍은 2017년에도 이어졌다. 서점가에서는 한국사회 여성 혐오 현상을 세밀하게 들여다본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페미니즘 소설과 페미니즘 관련 서적의 출간이 봇물 터지듯 했다.

2016년 이슈가 됐던 낙태죄 폐지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계기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기업 내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불거져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며 성희롱 근절을 외치는 목소리도 높아졌고,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은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 ■ 낙태죄 폐지, 사회 이슈로 재점화

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명이 참여하면서 낙태죄 폐지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현행법은 낙태한 여성과 낙태를 시행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상 유전적 정신장애와 신체 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등에 한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은 “형법상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재산권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여성은 터무니없는 수술비용을 요구받거나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행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임신 중절로 실제 기소되는 규모는 한 해 10여 건에 불과해 현행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주장도 있다. 또 남성의 경우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반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낙태가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살인 행위라는 생명 윤리의 관점에서 낙태죄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처벌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10년 복지부가 발표한 ‘인공 임신중절수술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낙태 수술 건수는 16만9천 건이었고 이 중 합법 수술은 6%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암묵적으로 시행되는 낙태 수술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술 건수는 복지부 통계보다 3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잇따라 불거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10월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사원이 직장 동료들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 몰래카메라 피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포털 게시판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샘 이외에도 현대카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성심병원, 국토정보공사 등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기업 내 성폭력 문제가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성희롱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실태 조사에 나섰고 정부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법에 정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을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높인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직장 내 성범죄는 고용주나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 보복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렵다. 또 조직 구성원들이 집단 따돌림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행실'을 거론하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회사가 오히려 사건을 은폐·축소 왜곡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2차, 3차 피해에 시달린다는 특징이 있다.

## ■ 생리대 유해물질 사태, 여성 건강권 논의 촉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16년부터 제기돼 온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문제가 생리대 유해물질 사태로 퍼졌다. 특히 3월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학교 김만구 교수팀이 국내 생리대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생리대 방출 물질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태는 더욱 증폭됐다.

김 교수팀은 실험 대상 전 제품에서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고 그중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출된 VOCs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유해성 논란이 이어졌다.

깨끗한나라는 자사 생리대 릴리안이 유해 논란을 빚자 8월 릴리안 전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환불해 주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생리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생리대는 여성건강과 직결되는 특수한 생활용품으로,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여성 건강권에 관한 관심과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여성계는 평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10월부터 생리대와 같은 기타 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성분을 표기하는 약사법개정 법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상위 5개 생리대 제조사는 시행 이전에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미국에서 제조한 생리컵의 국내 판매를 처음으로 허가했다.

환경부는 관련 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해 생리대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 가능성과 건강 피해 연관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 공공부문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정부는 11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로드맵(종합계획)을 발표했다. 3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한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10%로,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원, 군인, 경찰 등의 분야에서도 5년 후 달성할 여성 고위직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 등에 관련 규정을 넣도록 했다. 이 조치는 국내 여성의 교육수준과 역량이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성의 사회진출, 특히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직 진출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여성 관리직 임원 비율 국제 비교'를 보면 한국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1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1%보다 훨씬 낮았고, 여성 임원 비율은 2.4%에 그쳐 OECD 평균 20.5%를 한참 밑돌았다. 10대 그룹 여성 임원 비율은 2.4%로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부터 여성대표성을 제고해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이 강제성을 띤 할당제가 아니라 목표제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 ■ 한국 양성평등 144개국 중 118위

세계경제포럼(WEF)이 11월 발표한 연례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7'(Global Gender Gap Report 2017)에 의하면 한국은 성 격차 지수가 0.650으로 조사 대상 144개국 중 118위에 머물렀다. 튀니지가 117위, 아프리카 북서부 감비아가 119위다. 성 격차 지수는 10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을 이뤘다는 것을 의미한다. WEF는 2006년부터 매년 경제 참여·기회, 교육 성과, 보

건, 정치 권한 등 4개 부문에서 국가별 성별 격차를 수치화해 분석하고 순위를 발표해 왔다.

2017년 한국의 성 격차 부문별 지수를 살펴보면 보건 부문에서는 84위, 정치 권한에서는 90위였으나 경제 참여·기회 부문에서는 121위, 교육성과 부문에서는 105위에 그쳤다. 한국은 경제 참여·기회 부문과 정치 권한 부문에서는 세계 평균을 넘기지 못했다.

특히 경제 참여·기회 부문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업무 임금평등 항목에서 121위, 추정 근로소득(구매력 기준) 수준도 남성이 4만9천386달러(약 5천494만원)인 반면 여성은 그 절반 수준인 2만2천90달러(약 2천457만원)에 그치며 역시 121위로 하위권을 달렸다.

정치 권한 부문에서는 여성 최고 지도자 집권 기간 항목에서는 28위였으나 여성 각료의 비율은 11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교육성과 부문에서는 고교 졸업 후 3차 교육 평등도가 11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건 부문에서는 건강 기대수명 평등은 세계 최고였지만 출생 시 남녀 성비 불균형이 13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 ■ 청소년 실태조사…“결혼·출산 꼭 해야 하나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결혼 후 아이를 꼭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2017년도는 만9~24세 청소년 7천67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치관 조사'와 통합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49.1%를 차지했고, '결혼해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답한 이들도 46.1%나 됐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55.3%,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49.8%를 각각 차지해 남자 청소년의 43.3%, 42.4%보다 결혼 및 출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수입보다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3~18세 청소년들의 직업선택 기준을 보면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능력이 30.4%로 1위, 적성 20.6%로 2위를 차지했고, 안정성이 17.6%로 3위를 차지했다. 안정성을 꼽은 대답은 5년 전 5.5%보다 세 배가량 뛴 수치다. 장래성을 중시한다는 응답 역시 4.9%에서 11.3%로 늘어난 반면, 경제적 수입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14.0%에서 10.9%로 줄었다.

부모, 특히 아버지와의 거리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주중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41.1%에 그쳐 어머니와 30분 이상 대화하는 비율 72.2%보다 훨씬 낮았다.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대학 졸업 전까지가 52%로 가장 많았고, 취업 전까지가 18.6%, 결혼 전까지가 5.7%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82.9%로 3년 전 73.6%보다 늘었으나 사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일주일

간 사교육 시간은 9시간 26분으로 3년 전(9시간 30분)보다 약간 줄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 인권존중, 다양성 인정 등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식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 13~18세 청소년의 52.8%, 만 19~24세 청소년의 41%가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만 13~18세 청소년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5점으로 나타나 2008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을 넘었다.

반면, 통일에 대한 인식은 낮아졌다. 만 13~18세 청소년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58.9%로 5년 전 67.4%에 비해 줄었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도 5년 새 52.5%에서 40.9%로 낮아졌다.

## 소비자보호

### ■ 개요

2017년은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와 푸드포비아(음식 공포증)로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거진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3월 여성환경연대가 유해물질 방출 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파장이 퍼졌다.

7월에는 고기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소비자들은 어떤 것을 믿고 먹거나 써야 하는지 혼란에 빠졌다.

### ■ 생리대 유해성 논란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2016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제품을 사용한 뒤 생리 양이 줄거나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는 사례가 연달아 게재되면서 시작됐다.

2017년 3월 여성환경연대는 강원대 생활환경연구실 김만구 교수 연구팀과 공동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10종에서 유해



▲ 여성환경연대가 9월 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리대의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를 촉구하며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